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대한반도정책 : 전망과 과제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미국 국민들의 정서와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제시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대외정책에서 ‘신고립주의’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과정에서 미국이 기존의 개입주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을 지양해야 하고 안보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시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한반도정책이 수립되기까지는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한 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예상되는 바, 미국의 확장억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선거과정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사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아울러 미국 외교협회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출한 ‘CFR 보고서’가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로 ‘핵동결 협상’을 제시하는 등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장기적으로 구상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5 트랙 등 다양한 차원의 ‘전략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I. 트럼프 당선의 의미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미국 대외정책에서의 변화와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의 당선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미 대중들의 정서와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트럼프는 경제 불황과 실업문제 등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갖고 있던 블루칼라 노동자와 백인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선거전략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저학력·저소득의 백인 유권자들의 결집이 트럼프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선거기간 중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을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등 그동안 미국 정치권 내에서 금기시되었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함
 - 종교, 인종,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대신 기존 체제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정서를 파고 든 것임
- 대외정책에서 트럼프는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표방하는 고립주의가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민심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임
 -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7%가 “미국은 미국 내의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고 다른 나라 일은 다른 나라가 해결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 의견은 37%에 불과하였음
 - 미국인 다수가 미국의 자원과 에너지를 국제적 역할에 투입하기보다 당면한 국내문제 해결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고립주의적 성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임
 -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 상원의원 역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외정책을 주장한 바 있음

II. 트럼프의 외교정책 : 신고립주의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무역통상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주의,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고립주의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고립주의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오래된 전통 중 하나로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외교노선을 의미함
 - 고립주의가 미국 외교정책으로 확립된 계기는 1796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 연설’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워싱턴 대통령은 “영구적인 동맹(permanent alliances)을 맺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미국은 제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가 1823년 ‘먼로 독트린’을 선언한 이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고립주의 노선을 지속한 바 있으며, ‘먼로 독트린’에서 말하는 고립주의는 유럽지역에 국한되었던 것으로서 유럽으로부터의 불간섭을 의도한 것으로 평가됨¹⁾

- 최근 미국 내 여론은 고립주의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1935년~1941년 당시 미국 여론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²⁾
 - 당시 고립주의는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미국인들이 경제적 대공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국제적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경제문제 해결 등 국내 과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가 외교정책에 반영된 것이었음
-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소련과의 냉전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사실상 ‘세계경찰’을 자임하며 각종 국제문제에 관여하는 개입주의(국제주의)적 정책으로 전환됨
 - 미국이 개입주의로 전환하게 된 데는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 추진이 가져올 해외시장에서의 입지 상실에 대한 우려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제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며,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자유무역(Free trade)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은 ‘국가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 트럼프는 대선과정에서 위와 같은 개입주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 하되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신고립주의적 정책을 표방함
- 지난 5월 트럼프는 외교안보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지나친 대외 확장이 미국외교의 문제’라고 비판하였으며 ‘안보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힘
 -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과 민심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트럼프는 미국이 유지해온 자유무역질서, 동맹질서에 대한 불만도 여과 없이 표출해온 바, 미국의 실질적인 ‘국익 추구’에 집중할 것임
-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인들이 추구한 고립주의가 지닌 일방주의적 특징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지니나, ‘강한 군대 재건’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비증강에 거부감을 갖고 비군사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었던 과거 고립주의와 차이를 보임
 - 선거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이 시퀘스터(Sequester)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미국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힘
 - 트럼프가 국내 경제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고립주의 시대에 표방하였던 비군

1) ‘먼로 독트린’의 고립 원칙은 유럽이 미 대륙에 개입하지 않는 한 유럽문제에 미국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원칙은 미국이 유럽문제에 개입할 능력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큰 의미가 없었음. 권용립, 『미국 외교의 역사』 (서울: 삼인, 2016), pp.162-163.

2) 1935년에서 1941년 시기 미국의 고립주의와 관련해서는 남궁 곤,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사회적 배경: 1935~1941년 고립주의 여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5집(2001) 참조.

사적 경향이 아닌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는 기존의 고립주의보다 군사력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호전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고립주의를 추구할 것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시대 미국이 표방하는 고립주의에 있어 국제문제에 개입하느냐 여부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임

- 트럼프는 당선 직후 승리 연설에서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아울러 대선과정에서 공화당이 제시한 정강은 미국이 태평양국가(Pacific nation)임을 지적하는 가운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취하는 고립주의적 성향은 경제적·군사적인 국익 추구를 위해 개입주의적 성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개입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될 것임

III. 미국 실행정부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전망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정책에 있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는 아시아보다는 유럽과 중동지역 등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기간 중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미·중간 통상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함

- 선거과정에서 트럼프가 제시한 정책을 평가할 때 비판은 강하지만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과 공약의 비일관성 등으로 인해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임

○ 대중정책에 있어 트럼프 정부는 보다 강경한(tougher) 노선을 취하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미·중간 경쟁 양상이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음

- 선거기간 중 트럼프의 대중정책은 안보정책보다는 미·중간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문제 등 주로 통상정책에 치중하였던 바, 대중외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됨
- 대중관계에 있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무역문제와 북핵문제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미국의 경제·외교안보 이익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지역안보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

책을 지지하고 대중 압박에 동참하라는 차원에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의 대북정책 구상이 현재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간 잠정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대선과정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상을 모두 언급하는 등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북한과의 대화를 시사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트럼프는 지난 1월 공화당 경선 당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평가하였으나 6월 애틀란타 유세에서는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 카드를 모두 시사함

○ 한편, 지난 6월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트럼프에 대해 “현명한 정치인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평가하는 등 우호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 바, 북한은 차기 미국 정부가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를 시도할 경우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오바마 행정부의 재난에 가까운 대외정책 실패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함

-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트럼프당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선택(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역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 동 보고서는 권고사항에서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로 ‘핵동결 협상’을 제시한 바, ‘미국은 시급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도록 협상방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제인 하머 우드로윌슨센터 소장이 대북 협상론을 주장하는 등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편, 트럼프는 북한문제에 있어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중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지적한 ‘CFR 보고서’의 부제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국의 관여(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라는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보고서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를 성패의 관건으로 분석하였음

□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

연합

- 트럼프는 한국을 '안보무임승차국'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도 함
-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을 실제로 철수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폴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지난 18일 한미동맹을 '사활적 동맹(vital alliance)'으로 표현하면서 동맹 기조를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³⁾
 -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주한미군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미 국방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당선 후 실제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낮음
 -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14일 한국의 의원외교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미국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한편,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 전문가들은 '전술핵을 대부분 폐기했고 전략핵무기는 한반도 전구배치가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일축함
- 무역·통상정책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보다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됨
- 트럼프는 선거과정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비준 반대와 한미 FTA의 재검토를 주장해온 바, 1997년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1이 사라진 것은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한 무역협정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것을 걱정하는 미국 내 여론 가운데 국무장관시절 TPP를 지지했던 힐러리 클린턴조차 선거과정에서 TPP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한미 FTA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대중국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한중 모두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3) 마이클 폴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트럼프 정부의 임기 초기 한반도정책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IV. 정책제언

□ 미국 실행정부의 출범은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등 한국 외교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한반도정책의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차기 정부 출범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관심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내 문제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는 한편, 구체적 구상이 제시되지 않은 외교안보 정책 등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실제 대외정책 결정과정은 다차원적인 제도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인 바, 대통령후보로서 선거과정에서의 언급과 취임 후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임
- 다만, 트럼프의 독단적 리더십이 갖는 특성상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음

○ 트럼프의 고립주의 노선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이 지니고 있는 국제적 지위와 여러 정치·경제적 이점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바,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나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과 같은 정책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는 동맹국과의 관계조차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인 바, 취임 후 한반도가 미국의 주요 이익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 한미동맹 등에 관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당선자 인수위 기간을 거쳐 취임 후 있을 '정책검토(policy review)' 기간에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이 수립되기까지는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확실성의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임

○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 운용 전반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와 사드문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2018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2019년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이 결정될 예정인 바,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가운데 양국간 호혜적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2014년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15년 약 9,3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였음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박근혜정부에서 재연기하기로 결정되었던 바, 트럼프 정부의 출

- 범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계기로 삼고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임
- 사드 배치 문제는 미 국방부의 의지가 강한만큼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드 운용 비용에 관하여 미국의 추가 요구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선비핵화’를 고수해온 미국의 대북정책이 차기정부 출범 이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최근 워싱턴 정가의 변화 움직임이 당장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온 우리 정부도 이러한 대화 국면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대북 강경론을 폈던 김영삼정부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간 북미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이 소외되었던 상황과 같은 우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임
-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된 바 없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문제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핵문제 해결 등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해야 함
-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영에 제임스 마티스 전 중앙군사령관 등 강경 보수성향의 인사들의 입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긴요할 것임
- 제재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한계를 지니는 바,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 추진 필요
- 지난 2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 논의를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장기적으로 구상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서 제시해야 할 것

□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공동 프로젝트나 1.5 트랙 등 다양한 차원의 ‘전략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한미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의 한반도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불명확하였던 바, 새롭게 구성될 외교안보 참모들의 역할이 미국의 대북정책 등 한반도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미국 의회와 새 정부에 참여할 인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한미동맹 현안과 북핵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